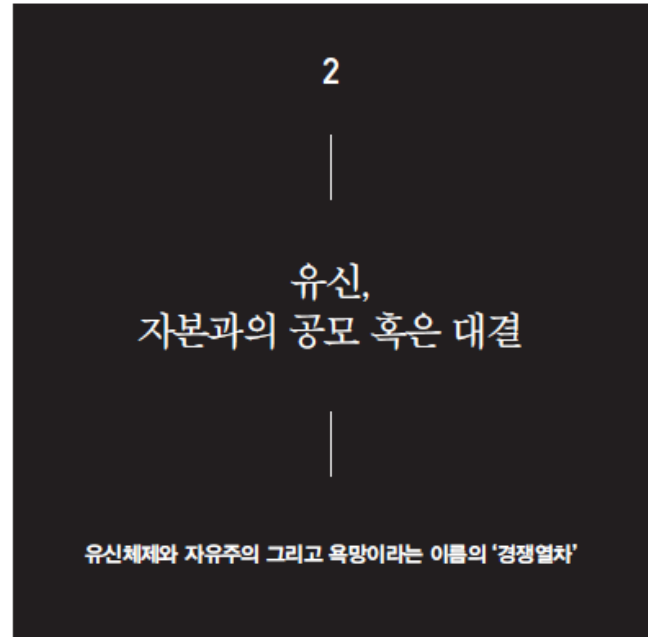


우리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고, 18년 독재와 늙은 왕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새 꽃이 필 거라는 것쯤은 예감할 수 있었다. 박정희 시대는 그런 비극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시대의 모더니즘과 산업화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집단적 경험이자 새로운 길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긴긴 성찰의 대상이다.

우리는 지금도 피로워하는 민주주의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자들은 피로워한다. 가진 돈이나 먹은 나이 따위에 함몰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싶어한다. 또한 그런 고민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도 나이를 꽤 먹었다. 그런데 저 군복 입은 '어버이'들, 또 조로해버린 수구 보수와 기득권을 누리는 486·586들, 그들이 우리를 청년으로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상을 포기하지 못한다. 박정희나 그의 딸, 또 그를 따르는 배부른 사람들보다, 또 그 짝패인 소위 '백두혈통' 김씨 식솔과 그 수하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공화국의 국민, 또는 정의와 선에 강한 한반도 주인이 되기를 꿈꾼다.



유신체제 붕괴를 1년 남짓 남긴 1978년 9월 9일 오후, 김포공항에는 귀빈을 넘어 '진객(珍客)'으로 불린 팔순의 노경제학자 한 명이 홍콩으로부터 막 날아왔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 A. von Hayek). 주지하듯이 그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함께 20세기 신자유주의의 최고봉을 이루는 헌신적인 자유지상주의



1978년 9월 방한해 당시 상공부 장관 최 각규를 비롯해 전경련 관계자들을 만난 신자유주의 이론가 하이메크.

자료,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음으로써 2차 대전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케인시안 시대의 종결을 알리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만개를 선도한 인물이다. 최고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그가 최악의 반자유주의적 유신국가를 방문한 까닭은 무엇일까.

경제개발이 불러온 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

어느덧 시대의 흥아가 된 자유주의를 키워드로 1970년대를 검색해보면 무엇이 나올까. 먼저 정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가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 1970년대의 정치와 운동을 민주 대 반민

주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 자유주의의 반자유주의의 성격이 짙었다. 1975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전격 처형에서 보듯 상계(常軌)를 벗어난 체제의 살벌함은 수많은 지식인을 민주화운동으로 몰아갔는데 그들이 붙잡은 핵심 가치는 곧 자유주의였다. 사상·양심·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인권이 저항운동의 마르지 않는 이념적 저수지 역할을 했다. 요컨대 자유주의라 쓰고 민주주의라 읽은 셈이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자유주의는 상당량의 검색 결과를 보여 줄 터였다. 이른바 '동블생(동기타·블루진·생맥주)'과 장발로 대표되는 청년층이 향유한 대중문화 흐름은 서구 자유주의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이었고, 문단의 자유주의를 상징했던 『문학과 지성』이 1970년 창간됐다. 유신체제는 이런 흐름을 "서구의 노라리풍"이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했으며, "빠다에 버무린 깎두기"라는 민족주의적 비아냥거림도 있었다. 개인에 눈뜨고 개인의 자유를 열망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유신의 한복판에서 대거 출현한 셈인데, 실상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체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경제개발이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서구화 그리고 대중사회화가 그 요건이었음을 생각하면 자유주의는 유신의

*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유신 반대 성향이 있는 인공들(도야중 등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이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한국방송 《미디어 비평》의 '오늘의 역사'는 인혁당 사건이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에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사생아인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주의는 어떠했을까? '경제유신'으로 불리는 1972년의 8·3조치⁸는 국가가 금융시장에 자의적으로 개입한 최악의 반자유주의적 정책임이 분명했다. 중화학공업화는 박정희가 총사령관이 돼 추진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으며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즉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시장의 자유 대신 국가의 '자유'에 기초했다. 모든 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경멸해 마지않던 박정희였으니 아마도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의 통제와 질서에 영향을 받았거나 만주국의 계획적 공업화에서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 자주국방을 내세우던 유신체제로서는 군수산업 발전이 목전의 과제이기도 했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소비재 생산 부문만으로 '국민경제'를 구축하기가 곤란했고 그러므로 생산재 생산 부문, 즉 중공업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이 과제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면 사실상 백년하청일 수 있었다. 한국은 이미 세계시장과 긴밀히 연동되었고 세계적 규모의 산업 연관 구조상 생산재 부문 확대는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곤란했다. 다시 말해 해외자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어려웠다. 세계은행과 서구자본이 포항제철 건설을 반대한 이유도 그

8 박정희 정권은 1972년 8월 3일에 이른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 긴급명령 15호'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제에 허락하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헌법 73조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기업들이 굶어 쓴 사제의 상황을 동경하는 것이었다. 민간 투자와 고용증가 둔화 현상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개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것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국내자본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다. 영혼 없는 자본의 속성상,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자본이 돈벌 가망이 없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결국 생산재 생산 부문 확대를 위한 투자는 자본과 시장의 자유가 아닌 국가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던 셈이다. 물론 유신체제가 자본을 공짜로 동원하지는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었다. '유신국가'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자본에 각종 특혜와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사업은 망해도 이윤은 남길 수 있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반시장적 특수 조건이 자본에 제공된 셈이었다. 자본의 입장에서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윤이지 않겠는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자유보다 이윤이 남는 통제경제가 자본 증식에 유리하다는 것은 전시경제부흥의 역사가 증명한다.

자본의 흑묘백묘론은 자본 증식에 도움이 되지만 한다면 박정희든 하이에크든 양쪽 모두와 합종연횡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본의 입장에서 국가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주체이자 통제와 간섭의 주체이기도 하다. 국가의 양가적 역할은 사안과 정세에 따라 유동적일 텐데 자본의 덩치가 커지면서 사태의 양상이 크게 바뀐다. 1970년대 초반까지 자본은 국가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정도였으나 후반이 되면 능동적 행위자의 모습이 강화된다. 국가 입장에서도 개별 자본을 요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자본을 통제할 수는 없게 된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가 작동하면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중화학공업화가 바로 자본의 덩치를 키우는 핵심 계기였다.

사태가 이러했기에 유신체제와 박정희가 하이에크의 방한을 반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8박 9일의 짧은 체류 기간 중 그가 만난 정부 고위 관료는 최각규 상공부 장관 정도였고 환영 만찬장에도 정부 측 인사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가 하이에크 방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동아일보』는 특파원을 동원해 홍콩에서부터 하이에크를 취재했는가 하면 조순, 김입삼 등과의 대담까지 마련하는 등 정성껏 대우했다.¹

『동아일보』의 관심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동아일보사 자체가 삼양사로 대표되는 호남자본의 대표주자인 김성수 집안 계열사였기에 자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1970년대 보수 야당의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다. 언론자유운동에 나선 기자들의 해직에서 나타나듯 동아일보사 사측이 권력과 타협 내지 야합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당시까지 『동아일보』가 야당이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78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의 「신년사」를 보자. 『동아일보』는 당시를 전환기로 규정하고 “근대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정립” 필요성을 기본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합리성과 경제성과 과학성”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료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노동 집약형에서 자본 및 지식기술 주도형으로, 행정지도 체제에서 자유시장 원리의 이행”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다시 “국민의 창의와 경쟁과 자발

성과 자유의 원칙”으로 요약했다.² 『동아일보』의 경제 관련 논조는 사실상 근대화와 자유주의로 요약 가능하다. 민간 주도와 자유시장 원리의 강조는 김대중 정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발전’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전경련은 왜 하이에크를 초청했을까?

그런데 하이에크를 초청한 주체는 동아일보사도 아니었고 유신체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를 초청한 것은 다름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였다. 전경련의 초청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벨상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지식체계에 대한 한국 사회 및 엘리트 지식인들의 오랜 콤플렉스를 생각한다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전경련이 이런 이유만으로 그를 초청할 정도로 한가했을 리 없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자유, 경쟁, 시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그의 기본 입장은 특정 개인이 모든 지식을 축적할 수는 없지만, 분산된 지식도 시장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시장이 최고의 계획보다 낫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적 자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에 불과하다. 그의 목표는 ‘국가의 감시 아래 있는 시장 대신 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였다. 그는 또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



1978년 남덕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수입개방을 무기로 통화 및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고 결의했다. 남덕우 부총리(태극기 앉자리) 왼쪽으로 김용환 재무부 장관, 최각규 상공부 장관, 신형식 건설부 장관, 오른쪽으로 장덕진 농수신부 장관, 장예준 동력자원부 장관, 신현확 보건사회부 장관이 앉아 있다.

데,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또한 경제적 자유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³ 하이에크가 방한 도중 중앙은행의 발권기능 폐지와 민간은행의 자유경쟁을 주장해 대담자를 당황시킨 상황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⁴

하이에크의 방한은 확실히 (신)자유주의의 좋은 계기였다. 『동아일보』는 “자유와 고귀함을 깨닫게 되고 민간 창의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이에크의 내한은 이 이상 값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당시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에서 공동 발행하던 『정경연구』는 공공연하게 친정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9월호에 “자유사회인 한 경제발전의 주인공이 민간기업이지 정부의

계획당국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 당연한 이치”라는 주장을 실었다.

하이에크 방한 무렵인 1970년대 중·후반의 자본은 확실히 국가권력의 입만 바라보던 왕년의 그들이 아니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국내총생산에서 46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9.8퍼센트에서 17.1퍼센트로 높아졌다.⁵ 커진 덩치만큼이나 목소리도 커졌다. 당시 전경련 회장으로서는 하이에크 초청의 주역이었던 정주영은 1978년 12월 28일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의 전환기적 결단을 촉구하며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에 넘겨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9년 1월 17일에는 경제4단체장과 경영자협회장이 신현확 부총리를 초청해 ‘관·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가격 정책, 금융기관의 자율적 운영, 자율적 임금 결정 등을 요구했다.

재벌은 무소불위의 유신체제를 향해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했는가 하면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어갔다. 1977년 의료보험 전격 실시가 가능했던 것도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벌들의 동의 덕분이었다. 재벌 그룹 문화재단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되는가 하면 각종 스포츠단체장을 재벌 회장이 장악한 것도 1970년대부터였다. 요컨대 자본의 사회적 형식으로서 기업은 시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스며들었고 국가로 역류했다.

하이에크 방한 직후인 1978년 12월 유신의 마지막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9년간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남덕우 대신 신현확이 경제부총리로 기용된 것이 핵심이었다. 이 개각은 일차적으로는 경제안정화